

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

2013. 5. 29

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



보고순서

국민경제자문회의

1. 운영목표와 조직

2. 운영 기본방향

3. 주요 실천방안

참고.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요



1. 운영목표와 조직

운영목표

대통령 자문 등 **헌법에 명시된 고유기능을 활성화**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정목표 달성에 **실질적으로 기여**

조직

새정부 국정과제 등을 감안, **창조·민생·공정경제, 거시금융** 분과로 구성

구분	분과위원	담당분야
창조경제 (8)	현정택(부의장, 인하대), 최원식(분과위원장, 맥킨지), 현대원(서강대), 김대호(인하대), 손양훈(인천대), 허은녕(서울대), 이성용(베인&컴퍼니), 윤창번(김&장)	산업, IT, 융복합, 신성장 동력, 서비스
민생경제 (8)	안상훈(분과위원장, 서울대), 유길상(한국기술교육대), 문형표(KDI), 유경준(KDI), 손원익(조세연), 김동환(안양대), 김경환(서강대), 김현아(건설산업연)	복지, 고용, 노동, 연금, 재정, 서민생활
공정경제 (7)	서동원(분과위원장, 김&장), 신인석(중앙대), 이장우(경북대), 정규재(한경), 김창준(미래한미재단), 김세종(중기연), 이석근(롤랜드버거)	동반성장, 경제민주화, 규제개혁, 소비자, 시장 구조개선
거시금융 (7)	정갑영(분과위원장, 연세대 총장), 조윤제(서강대), 조동철(KDI), 박재현(매경), 박영석(서강대), 이상빈(한양대), 안덕근(서울대)	거시경제 전반, 국제경제·통상, 금융

* 조직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에 미래부장관 등 포함

① 정부정책 평가와 미래의제 제안

-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과 방향 제시
- 경기활성화,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 평가와 보완방안 제시
- 국내외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경제 현안 발굴

② 창조경제 성공적 실현을 위한 선도

-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 요인 발굴과 대안 제시
- 정부 협업부처간 정책조율과 가교 역할 수행

③ 국민·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촉진

-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
- 현장중심의 정책환류를 위해 국민의 오해와 불만사항 등을 수렴

① 효율적인 자문회의 운용

- **분기별** 전체회의(대통령주재), 중국경제와 한중협력, 국민연금 등 현안사항에 대한 수시회의, **월별** 분야별 회의 추진
- 국민대통합위원회, 청년위원회 등 유관 자문회의와 **협업체제** 구축
 - * 안건에 따라 유관 위원회와 합동 회의개최, 자문회의 위원의 타위원회 배석 등 검토

② 자문보고서 및 총서 작성

- 회의결과를 취합, 정리하여 **정책자문 보고서** 작성
- 자문위원의 **개별 보고서** 기획 및 작성
- 매년 '경제정책성과와 보완과제(가제)' **총서**를 발간
- 자문위원과 민관 연구기관간의 **공동 연구보고서** 발간
 - * 예: '국민행복 제고방안', '고용률 증대전략', '성장잠재력 확충방안' 등

③ 정기 여론조사와 국민교육 추진

- 경제정책에 대해 대한상의 등 **경제단체**, **민관 연구기관** 등과 **공동 여론조사** 실시
- 자문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**국민·기업애로** 접수 및 **창의제안** 공모
- **창조경제**, **일자리 창출**, **국민행복 정책** 등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**국민교육** 방안 마련

④ 국내외 세미나 개최

- 해외 **브루킹스연구소**, **AEI**(American Enterprise Institute), **헤리티지재단** 등과 공동세미나 개최
- 국내 KDI 등 **민관 연구소**, **경제학회** 등과 공동포럼 추진

⑤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 구축

- 분과별로 **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**를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
- 자문위원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규모 **간담회**, **브라운백미팅** 활성화

설치 근거

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

헌법 제93조 제1항:

“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”

주요 기능

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정책 자문, 여론수렴 및 형성(법 제2조)

-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수립
- 국민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
-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 수립
-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관심사항에 대한 자문 등

위원 구성

대통령(의장), 30인 이내의 민간위촉위원, 5인 이내의 당연직*위원, 출연연구기관장·경제단체장 등 사안별 지명위원으로 구성

* 경제부총리·경제수석(법률) 미래부장관·대통령비서실장·미래전략수석(운영규정)

**명실상부한 헌법상 최상위 경제자문기구로서
국가경제 발전과 국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**

감사합니다